
부 록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77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	85

1. 금융통화위원회 주요 의결사항

제13차(2023.7.13.)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높아진 금리의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둔화 흐름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통화긴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제금리가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다가 미국 물가상승률 둔화 등으로 약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경제의 회복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다. 고용은 예상보다 높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IT 경기부진 완화 등으로 수출이 개선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1.4%)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는 6월중 상승률이 전월 3.3%에서 2.7%로 크게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이는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6월중 3.5%로 전월 3.9%보다 상당폭 낮아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3.5%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까지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물가는 하반기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지속 등으로 금년중 연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아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등락하고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 상승 전환하였고 지방은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제14차(2023.7.27.)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p>제4조(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대상 증권) ①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 9.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 <신 설></p>	<p>제4조(재할인 및 증권담보대출대상 증권) ①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 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재할인 또는 담보로 취득하는 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9호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 ~ 9. (현행과 같음) 10.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p>	<p>- 지방채, 공공기관채, 회사채를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 <u><신 설></u></p> <p>② (생략)</p> <p>제8조(대출기간의 연장)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2. 10.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는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1. 13.>, <개정 2023. 4. 11.></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12. 「상법」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 ②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12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1인 이상으로부터 A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증권(2인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저등급이 AA-등급 이상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대출기간의 연장)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2. 10.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2023. 7. 27.></p> <p><u>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u></p>	<p>- 일정한 등급 이상의 신용 등급을 받은 증권으로 적격 담보 범위를 제한</p> <p>- 항 번호 내림</p> <p>- 자금조정대출 만기를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p> <p>- 일부 적격담보의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상시화</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자 명시</p>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I. 대출이율		I. 대출이율		- 자금조정대출 금리인하
구 분	이 율	구 분	이 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출중 1. 자금조정 대출	(1)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한국은행 기준 금리” 라 한다)에 1%포인트 를 더한 이율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 하는 이율 (2)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출중 1. 자금조정 대출	(1) 금융통화위원회가 공표하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하 “한국은행 기준 금리” 라 한다)에 0.5%포인트 를 더한 이율 다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미만일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 하는 이율 (2)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하할 수 있음	
2. 금융증개 지원대출	연 2.0% 다만,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¹⁾ 에 대한 대출이율은 연 0.25%	2. 금융증개 지원대출	(현행과 같음)	
3. 일중당좌 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	3년물 국고채수익률에서 콜금리(무담보 익일물 기준)를 차감한 율(최저이율은 0%)로 하되, 국고채수익률과 콜금리는 각각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직전분기 말월 중 평균금리로 함	3. 일중당좌 대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 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일중당좌대출에 한함)	(현행과 같음)	
주: 1)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		주: 1)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 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른 한도 유보분 중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제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출		

II. 예금이율

구분	이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 규정 제2조에 따른 예금종	
1. 당좌예금	연 0%
2. 자금조정 예금	(1)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1%포인트 를 차감한 이율 (최저이율은 0%) (2)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상할 수 있음

II. 예금이율

구분	이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예금 규정 제2조에 따른 예금종	
1. 당좌예금	연 0%
2. 자금조정 예금	(1)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0.5%포인트 를 차감한 이율 (최저이율은 0%) (2)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까지 이율을 인상할 수 있음

- 자금조정예금
금리인상

III. 기타

1. 시행일자 : 2023년 1월 13일

III. 기타

1. 시행일자 : 2023년 7월 31일

- 시행일자
명시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차액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1. ~ 8. (생략)</p> <p><신 설> <신 설></p> <p><신 설></p> <p>9.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p>	<p>제21조(담보증권의 제공)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차액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된 지방채</p> <p>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p> <p>11. 「상법」 제469조에 따라 발행된 회사채</p> <p>12. (현행과 같음)</p>	<p>- 적격담보증권 추가에 따른 수정</p> <p>- 지방채, 공공 기관채, 회사 채를 적격담보 증권에 추가</p> <p>- 호 번호 내림</p>

현행	개정안	비고
<p><u><신 설></u></p> <p>② (생략)</p> <p>③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제2호의 담보증권은 제1그룹으로, 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담보증권 중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1그룹으로 관리한다.</p> <p>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액결제 대상거래 중 어음교환(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담보증권 제공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액결제 신규참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재는 해당 기관의 담보증권 제공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⑤ 총재는 제1항 각 호의 증권에 대한 담보인정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차액결제참가기관별 담보증권 제공금액을 해당 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상하 각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1인 이상으로부터 A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증권(2인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저등급이 AA-등급 이상의 증권)으로 한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제2호의 담보증권은 제1그룹으로, 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담보증권 중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1그룹으로 관리한다.</p> <p>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액결제 대상거래 중 어음교환(지급지시가 실시간으로 송수신되는 거래를 제외한다)은 담보증권 제공대상에서 제외하며, 차액결제 신규참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재는 해당 기관의 담보증권 제공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p> <p>⑥ 총재는 제1항 각 호의 증권에 대한 담보인정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계산된 차액결제참가기관별 담보증권 제공금액을 해당 기관의 순이체한도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상하 각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 일정한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증권으로 적격담보 범위를 제한</p> <p>- 항 번호 내림</p> <p>- 추가된 적격담보증권을 제2그룹으로 구분</p> <p>- 항 번호 내림에 따른 수정</p> <p>- 항 번호 내림에 따른 수정</p>
<p>제22조(담보증권의 대출담보 사용-처분)</p> <p>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이 제2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재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21조제3항의 제1그룹과 제2그룹에 속하는 담보증권 중 차액결제시점이 같은 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증권을 해당 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p>	<p>제22조(담보증권의 대출담보 사용-처분)</p> <p>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이 제2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차액결제 대상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총재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21조제4항의 제1그룹과 제2그룹에 속하는 담보증권 중 차액결제시점이 같은 거래의 결제이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증권을 해당 기관에 대한 대출담보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p>	<p>- 제21조 항 번호 내림에 따른 수정</p>
<p>부 칙 <2022. 10.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1. 13>, <개정 2023. 4. 11></p> <p><u><신 설></u></p>	<p>부 칙 <2022. 10. 27></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효기간) <삭 제></p> <p>부 칙 <2023. 7. 27></p> <p>이 규정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p>	<p>- 일부 적격담보증권의 유효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상시화</p> <p>- 부칙 신설</p> <p>- 시행일자 명시</p>

◇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및 경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가계 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추가 인상 필요성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세계경제는 높아진 금리의 영향, 중국의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국가별로는 둔화 흐름이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긴축기조 장기화 전망 등으로 국제 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중국 경제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등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이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1.4%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성

장경로 상에는 중국경제 항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 소비자물가는 7월중 상승률이 2.3%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다. 이는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다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 둔화가 이어진 데 주로 기인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3%로 낮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금년중 연간 상승률은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 3.3%를 소폭 상회하는 3.4%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원자재 가격 변화, 기상여건,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중국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상당폭 높아졌고 장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국제금리와 함께 상승하였다.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폭이 확대되었고 지방에서는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며,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상

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¹⁾

2023년 5월

모든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금년 1/4분기에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금융 부문의 부실위험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가운데 통화긴축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향후에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은 견조한 고용시장과 양호한 소비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의 하락 속도도 더딘 상황으로, 향후에는 은행 부문 불안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중국의 경우 리오프닝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교역이 글로벌 IT 경기 회복 지연, 높은 재고 수준 등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리오프닝의 파급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크지 않은 상황임. 향후에도 이는 경제적·지정학적 분절화(fragmentation), 중국의 자금을 제고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성장경로상 불확

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국내경제는 전년말 일시적 요인 등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대외여건의 하방 요인에 영향받아 다소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4월중 소비와 생산이 전분기의 큰 폭 증가 이후 다소 조정을 받는 가운데 투자, 수출 등도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1/4분기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장기 평균수준을 하회하였음.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추정됨. 이에 따라 금년도 성장률은 1.4%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성장경로상에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회복 시점이나 속도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것으로 평가함.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낸 반면 근원물가의 경우 상승 모멘텀은 꺾인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직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다소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의 기저효과가 줄어들고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하락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둔화 흐름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임.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비용 상승압력 누적 등에 따른 이차 파급영향, 양호한 서비스 수요 및 노동시장 상황 등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금융시장은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격변수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등락하고 있음. 다만 최근 팬데믹 이후 취급된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금액이 크게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하여 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크게 늘

1) 자세한 논의 내용은 해당기간(2023년 5월-2023년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어년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취약부문 상황 등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채권 시장에서 발행 물량이 동시에 늘어나 수급 부담이 높아지고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여타 금융·경제여건과 맞물려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일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수급여건에 영향받아 상승하였지만 변동성은 축소되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상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현재 금리수준이 성장과 물가의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 및 외환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분간은 성장과 물가 등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미국은 견조한 고용시장과 소비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통화긴축과 신용위축의 파급영향이 아직은 제한적이나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 소비가 큰 폭 증가하고 고정자산투자도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예상보다 성장세가 강했으나 대외교역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유로지역은 에너지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로 70달러 중반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세계교역은 상품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국내경기는 IT부진이 이어지고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파급효과도 더디게 나타나면서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민간소비는 4월의 큰 폭 증가 이후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비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 설비투자는 IT경기 부진으로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건설투자는 정부 SOC 예산 지출 감소 등으로 신규착공이 둔화되면서 감소로 전환되었음. 수출 역시 IT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나 일평균 수출액 기준으로는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고용은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당초 전망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부동산 시장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음. 국내물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석유류가격의 기저효과로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개인서비스 가격상승의 지속성이 높게 유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음.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완화적 흐름을 보이고 있음. 최근 들어 국내 단기금리가 다소 오르긴 했으나 미국의 통화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투지심리가 개선되었으며 외환수급도 원활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4월 들어 COFIX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내려왔으며 가계대출이 8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고 기업대출도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반면 금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국공채, 은행채 등의 발행 물량 규모를 고려해 볼 때에는 시장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그동안 인상된 금리수준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대출, 중소기업대출의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을 가져오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이러한 연체율의 상승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의 연체율이나 향후 추정되는 연체율 상승수준은 과거 10년간 평균연체율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거나 금융부문이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부실화가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을 높이고, 금융시장불안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점검과 대응을 요하고 있음.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끝나가고 있다는 시장의 기대로 원화 환율도 대체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도 당초 예상보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3%내외 수준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며, 근원물가는 아직 경직성을 보이며 여전히 인플레이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주고 있으나 하반기로 가며 상승 모멘텀이 축소되면서 연말에는 2% 중후반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상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통방회의에서는 금리를 3.50%에서 동결하고 추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 금융부문 안정성의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과 외환, 환율 동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세계경제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은행불안에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유로경제도 성장세가 크지 않으나 미국 경제는 견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국내경제는 반도체 등 IT경기 부진과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대외여건과 관련하여 작년 10월부터 7개월째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달까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원 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 머물고 있음. 글로벌 IT경기 부진으로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경제의 리오프닝 파급효과도 기대만큼 크지 않아서 우리 경제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높은 현실에서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수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수출제품의 구조적 변화와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금년 1/4분기에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음. 연간으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실현되었으나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상수지 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민간소비는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고 설비투자 와 건설투자는 부진한 흐름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4월에 14개월 만에 3% 대로 진입하여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근원물가의 경우 개인서비스 물가가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최근 3개월 연속하여 증가율이 4.0%로 경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향후 OPEC+의 감산정책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안정성, 원 달러 환율 추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 물가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어서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증가한 유동성이 아직 회수 중에 있고 여전히 물가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고용상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감소와 제조업경기 부진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6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음.

금융시장은 미국의 은행불안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금리 측면에서 시장금리

가 과도하게 낮아지면서 금융긴축 정도를 약화시키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일정부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낮은 금리와 함께 최근 주택경기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이는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등 향후 경제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축은행은 2011년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뱅크런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부동산PF 익스포저가 큰 상황임. 물론 과거에 비해 위기의 정도는 낮으나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금년 1/4분기에는 업권 전체로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금융상황 판단 지표인 금융상황지수(FCI)나 실질머니갭률로 볼 때 현재의 금융여건은 긴축적인 상황으로 통화긴축 장기화 과정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저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필요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원 달러 환율은 수출부진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에 따라 최근 1,300원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현재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차가 환율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환율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하반기 물가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물가안정기조가 확실히 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역대 최고수준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상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향후 근원물가의 움직임과 성장경로를 살펴보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결정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 금리인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은행부문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초과저축과 고용개선을 배경으로 완만하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2/4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IT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 리오프닝의 파급효과가 제약되면서 상반기 성장률은 주요국 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임. 앞으로 반도체 경기의 반등 시점, 대중국 수출과 관광객 회복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중장기적으로 설비투자 부진, 고용의 질적 악화 등이 성장잠재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서비스 수요회복과 2차 파급효과 등의 영향이 중첩되면서 근원품목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3%대로 낮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하방경직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소비자물가를 상회하고 있음.

국내 금융시장은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축소되고 신용스프레드도 소폭 하락하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고 있음. 다만 앞으로 은행채·MBS·한전채 등 채권 공급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연체율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잠재리스크가 적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경제·금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당분간 금리정책의 파급효과와 국내외 경제상황의 전개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앞으로 통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반기에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근원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도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과거 30년간 물가하락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 비해 느린 속도로 하락하면서 갭이 축소되거나 역전되었으나, 금번 하락기에는 다수의 물가충격이 중첩됨에 따라 근원물가의 하락속도가 더욱 완만하다는 특징이 있음. 특히 근원 서비스물가가 높은 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누적된 유가, 환율, 임금, 임대료, 차입비용 등 비용상승요인이 지난해 이후 서비스경기 회복에 힘입어 소비자가격에 전가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금년 들어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다행한 일이나 물가압력의 파급시차가 길다는 점에서 상당기간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함.

둘째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점임. 금융권 가계대출은 작년 9월 이후 디레버리징되었으나 4월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로 돌아서고 신용대출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플러스(+)로 돌아섰음. 특례보증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이 늘어난 영향이 있지만 국내외 금리인상기대 약화로 인한 시장 금리 하락의 영향도 크다고 할 것임.

셋째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도 작지 않다는 점임. 원/달러 환율은 금년 초까지 대체로 달러화 지수 움직임에 주도되는 흐름을 보였으나 3월 이후 경상수지 우려 등 국내 요인이 부각되면서 미달러화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음.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 부채한도 협상 등 국제금융리스크가 증가할 경우 원화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우려도 큼.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통화정책은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과 대내외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정책 및 재정정책과의 협조적 운영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

회복과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거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음. 일부 해외은행 파산에 따른 금융불안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임.

국내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가운데 취업자수는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다만 코로나 이후의 고용 회복을 고령층과 여성이 주도하고 있는 반면 청장년층 남성의 고용은 회복세가 더딘 상황임.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하지만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 금리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함.

소비자물가지수를 포함한 각종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거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근원물가는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공공요금 인상 유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대외여건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임.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물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금융·외환부문의 경우 대내외 금리 격차와 미국은행 위기 등이 환율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함. 그러나 그간의 금리 인상의 결과 많은 나라에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우려스러움.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향후 정

책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음.

요약하자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함. 현재의 금리인상 기초가 누적된 금융불균형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이에 대한 경계를 거두기엔 이른 시점임.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동결하고 물가 및 금융안정 불안 요인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당초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음.

90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국내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글로벌 IT 경기 위축이 이어지고 중국 리오프닝의 파급효과도 지연되는 등 주로 해외부문의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부진을 지속하였음. 다만 민간소비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호한 고용 상황이 가계소득을 뒷받침하면서 경기둔화 흐름을 일부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부진한 흐름은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서비스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수출도 중국경제 및 IT경기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성장세 회복 속도는 지난 2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전망경로에는 IT경기 반등시기, 중국경제 회복 속도 등 여러 불확실한 요인들로 인해 상하방 리스크가 큰 폭으로 내재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물가의 경우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웃

돌고 있음.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 등 공급요인의 기저효과가 확대되면서 오름세가 4월중 3%대 후반으로 낮아졌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 4.0%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며 경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양호한 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하방 경직성이 강한 개인서비스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기·가스 요금 등 비용인상의 이차 파급영향도 근원물가의 상승압력으로 가세하고 있음.

향후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당분간 기저효과가 작용하여 뚜렷한 둔화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흐름의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경우 상방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됨. 누적된 비용상승압력의 물가파급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서비스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근원물가의 하락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음. 물가의 경직성과 내재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인플레이션을 목표 경로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금융상황을 보면,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범위를 상회하여 긴축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금융여건 전반의 긴축 정도는 지난 연말에 비해 상당폭 작아진 것으로 보임. 금년 들어 장단기 국고채 금리가 모두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으며, 은행 여수신금리도 상당폭 낮아졌음. 신용공급 측면에서도 기업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자금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로 돌아서는 모습임.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일부 지역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부문의 조정이 주춤한 상황임.

한편 그간 우려해왔던 금융불안 리스크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임. 미국 중소형 은행 불안, 부채한도 이슈 등이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외환 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부동산 금융의 부실이 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될 리스크는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이들 취약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면서 성장, 물가 등 실물경제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물가의 경우 근원물가가 예상보다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방리스크가 확대되었으나, 성장 측면에서는 IT경기, 중국경제, 미국 금융상황 등에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임. 특히 최근 근원물가 하락세가 더디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정책기조에 비해 크게 완화된 금융상황으로 인해 물가 흐름이 당초 전망경로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하며 물가목표로의 수렴이 크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음.

2023년 7월

모든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음. 미국은 그

동안 정책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였음에도 금년도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는 등 예상보다 양호한 경기흐름을 보이고 있음. 유로지역은 역내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음. 미 연준은 향후 정책금리를 현 수준보다 다소 높일 것으로 보이며 유럽중앙은행도 추가적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도 정책금리 인상을 지속하였음. 중국은 리오프닝 이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이어갔으나 예상보다 회복세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내경기는 기존 전망 경로대로 둔화흐름이 지속되었으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임.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은 하락하고 고용률은 상승하였으며 취업자수 증가규모도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민간소비의 경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소비여력 축소에도 초과저축, 양호한 고용상황에 힘입어 자동차, 의류 등을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늘어나고 6월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설비투자는 연초의 급락 이후 기계류를 중심으로 소폭 반등하면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건설투자는 신규착공 감소세의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었음. 수출의 경우 그동안 지속되었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음.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 등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보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의 기저효과 뿐 아니라 근원물가 품목에서도 집세,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해 전년동기대비 2.7%를 기록하며 상당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연말까지 3% 내외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임. 금년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 전망치(3.5%)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나, 근원물가는 양호한 고용상황과 소비회복 지속 등으로 둔화속도가 더디지면

서 지난 전망(3.3%)을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 금융·외환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화로 국내외 채권시장 금리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외환수급 흐름과 환율은 대체로 안정적 모습을 보였음. 시장에서는 그간 누증된 금융불균형이 팬데믹 기간 중 더욱 심화되어 최근 들어 부동산 부문 익스포제가 큰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 부문의 자산부실이 부각되고 있음. 이는 금리상승, 부동산경기 하강과 더불어 이미 예견된 조정과정이라는 하나 신중한 대응을 요하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한 주택대 금리 등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반등하고,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에서 지난 4월 증가로 전환한 이후 5~6월에는 증가폭이 확대되었음. 높은 가계부채비율, 부동산 PF대출 부실 문제 등은 향후 정책운용 선택의 폭을 좁히고, 소비와 경기회복 및 시장심리를 억누르는 지속적 요인이 될 것임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통방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근원물가가 아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점차 둔화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비은행권을 둘러싼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기와 고용, 대외부문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측면들을 고려한 때문임. 지금 예상되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근원물가 둔화속도의 불확실성, 미래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긴축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향후 필요시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금융안정 상황, 물가 등 실물지표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동안 지속해온 긴축정책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최근 대외여건을 보면, 국가별로 성장 흐름이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긴축정책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정점을 지나 하락하고 있으나 근원물가상승률은 대부분 국가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금리를 동결했던 중앙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재개하거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임.

국내의 경우 경제성장률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거나 취업자 수는 기존 전망을 상회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년 만에 2%대로 진입했으나 연말에는 다시 3% 내외로 올라설 것으로 보임. 향후 성장 및 물가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주요국 경제상황, 에너지가격 등 대외여건 변화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함.

금융시장은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경기 부진이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폭 확대된 점이 우려스러움. 대출태도가 완화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금융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과 규제를 통해 시스템리스크를 제어하는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표됨.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무모한 투자는 자제하게 하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확보된 소비와 투자 여력은 향후 강한 경기 회복과 건실한 성장의 기초가 됨. 금리정책은 거시건전성정책과 조화를 이룰 때 순기능이 극대화됨. 필요시 규제 완화를 통해 취약부문에 유

동성을 공급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줄여가는 기초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세계경제는 금년 상반기중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향후에는 통화긴축 기초, 중국의 더딘 회복 등의 영향을 받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은 견조한 고용여건과 소비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둔화되었음. 향후에는 금융여건 긴축기조 지속의 영향으로 실물경제 위축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중국의 경우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있으나 대외교역과 투자가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경로의 하방압력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금년 말 이후 그동안 누적된 긴축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요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미국 경제의 흐름, 중국 리오프닝 파급효과, 글로벌 IT 경기, 기후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지정학적 이슈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의 향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국내경제는 투자와 수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2/4분기 중 소비는 소폭 조정되었으나 주요국 경기의 양호한 성장세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회복세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함. 하반기 이후에는 소비심리 개선, 양호한 고용여건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IT 경기 개선으로 수출도 호전되면서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되었으나 대외여건에 영향받아 그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함. 이에 따라 금년도 성장률은 당초 전망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

며, 향후 성장 경로상에는 중국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재정의 성장 기여도 하락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하방 리스크가 소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뚜렷한 둔화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근원물가 상승률도 완만한 집계 둔화 흐름, 개인서비스물가 오름폭 축소 등에 힘입어 둔화폭이 확대되었음. 향후에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유류세 및 공공요금 정책,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인한 물가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함.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하게 낮아졌던 국제금리가 주요국 국제금리와 동조화되면서 상승하여 금융상황이 긴축적인 영역으로 회귀되었다고 판단함. 그러한 가운데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데다 일부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불안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취약부문의 유동성·신용 리스크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그간의 감소 흐름에서 다시 증가로 전환됨에 따라 장기간 누증된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지연·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국내 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미 달러화 약세, 외국인 증권자금 유입 규모 확대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주요국 통화긴축 기대가 강화되면서 반등하였음. 내외금리차가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이상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음.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세계경제는 상반기 중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국가별로는 차별화되었음. 미국의 경우 1/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베버리지 곡선이 좌하향 이동하면서 경제의 연착륙 기대도 커졌으나,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금리상승의 영향으로 완만한 경기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임.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갈등, 정부의 온라인기업 규제, 부동산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임.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 서비스 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IT 경기사이클이 개선되면서 상반기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령화에 따른 초과저축의 소비전환 유인 감소, 중국의 수입수요 위축, 방한 관광객 정체 등의 하방 리스크도 커 보임. 물가는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와 계절요인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으나 대체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금년 하반기에 3% 내외, 내년 상반기에 2% 초중반으로 점차 안정되어갈 것으로 예상됨. 한편 작년 하반기 이후 감소 흐름을 보였던 가계대출이 2/4분기중 다시 확대되었는 바, 이는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정책대출 공급확대 등 정책 요인이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6월말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자금인출사태는 최근 진정되어 가는 중이나 부동산·건설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및 유동성 상황과 여타 비은행권에 대한 영향 등을 계속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최근의 경제·금융상황을 종합하면 물가, 성장, 금융안정 측면에서 정책금리의 상하방 요인이 교차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향후 전개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임. 다만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불균형의 재확대와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도 잠재해 있어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임. 한편 그동안 팬데믹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확대되었던 국내외 성장과 물가의 변동성이 내년 이후에는 점차 축소되면서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하락,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화, 민간 부채누적 등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통화·신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이슈를 계속 점검하고 통화·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의 정책조합을 통해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국내경제는 그간의 성장세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수출은 예상보다 양호한 주요국 성장세에 힘입어 비IT 품목을 중심으로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으며,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건조한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다만 설비투자는 글로벌 IT 경기 위축 등으로 부진을 지속하였음.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이 IT 경기부진 완화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소비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성장세를 점차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IT 경기 반등시기,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그리고 주요국의 추가 긴축 및 이에 따른 경기둔화 정도와 관련하여 전망경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물가는 여전히 높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6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낮아졌지만, 하반기 중에는 3% 내외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조적 물가흐름을 반영하는 근원인플레이션은 3%대 중반으로 목표 수준을 큰 폭 상회하고 있음. 양호한 서비스소비 등으로 수요측 압력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의 가격 전가가 이어지면서 개인서비스가격이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음.

향후 물가 오름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조적 물가의 하락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판단됨. 지속성이 강한 개인서비스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원물가의 하락이 더디게 진행되며 목표 수준으로의 안착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국제유가 추이,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서 비용측 충격이 재차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소지가 있음에 주목해야 함. 국내경제는 주요국과 달리 가계부채 등 민간신용이 유의한 디레버리지를 거치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하여 왔는데 특히 팬데믹 기간 중 위기대응 정책이 주요국과는 달리 통화·재정정책에 더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민간신용누증이 가속화되었음. 이에 따라 발생한 자산가격의 급등과 민간부채의 빠른 증가는 금융부문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고 물가의 안정기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당행이 재작년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되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간 이루어온 정책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됨. 앞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살아나는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하겠음.

한편 잠재되었던 부동산 금융의 부실이 최근 일부 현재화되면서 새마을금고에서 수신자금이 이탈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음. 그러나 일부 기관을 제외한 금융권 전반의 양호한 건전성, 정부의 적극적 대응 등으로 불안심리가 진정되고 있으며, 여타 기관 및 시장으로의 파급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긴축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에 잠재해 있던 부실이 드러나고 정리되는 것은 금융시스템의 정상적인 조정과정이며, 시스템의 복원력을 유지하고 금융의 증개기능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그 과정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질서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금년 들어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기저효과에 기인하며 아직 기조적 물가 흐름이 목표 수준으로 안착될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운 데다, 최근 일부 주택가격의 반등과 관련 가계대출의 증가가 다시 금융불균형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여 우리 경제가 거시적 안정 궤도로 조속히 수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임. 향후 통화정책 운영방향은 기조적 물가의 하향 안정세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데다 금융불균형 대응의 필요성도 증대된 만큼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물가불안요인의 현실화, 금융불균형 리스크의 확산 시에는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견조한 고용과 가계 초과저축에 기반한 소비지출을 바탕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생산, 소비 등 산업 전반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 유로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미약하고 일본 경제는 펜트업 소비와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지난 30년간의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음. 국내 경제는 반도체 경기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해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대외여건을 보면 지난 6월에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 증가,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 등으로 16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소폭 흑자로 전환되었음. 반도체 감산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대외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경상수지는 지난 5월 흑자로 전환되었고 상품수지와 본원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한국은행 전망 기준, 연간 24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흐름,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지난해 국제유가가 높았던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하였으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5%로 개인서비스 물가 오름폭 축소 등에 따라 3%대 중반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내외 경기흐름과 함께 국제유가와 원 달러 환율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임. 고용상황을 보면 6월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3만 3천명이 늘면서 예상보다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제조업 취업자수는 최근 6개월 연속 감소되고 있고 15~29세 청년 취업자도 8개월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수는 증가하고 있음. 특히 6월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수는 33만 2천명이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수 증가 33만 3천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수는 34만 3천명 증가하여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를 메우고 있는 상황임. 금융시장은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은행의 가계대출이 4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향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특히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점을 인정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DSR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형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지난 4월 은행권 연체율이 0.37%로 증가하였고 증권회사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연체율도 3월말 기준으로 각각 15.88%와 4.07%에 달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됨. 최근뱅크런을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6월 29일 연체율이 6.18%로 지난해 말 연체율 3.59%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관리 감독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서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원 달러 환율은 1,300원을 전후로 등락하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차가 환율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환율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종합적으로 볼 때 물가는 하락추세이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본격 회복국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

으로 부동산PF 등 취약부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상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안정 기조가 확실히 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근원물가 흐름, 경제의 성장경로,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2023년 8월

모든 위원들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들이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세계경제는 그간 누적되어온 고금리 정책의 여파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났으나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국내경제 여건을 보면 소비, 투자를 비롯한 실물경제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미흡하지만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빠르게 안정되어 2달 연속 2%대에 머물고 있으나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 기후 등의 영향으로 다시 3%대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금융시장에서는 미 국채금리 상승, 중국 리스크 부각 등 대외요인의 영향으로 금리, 환율 등의 변동

성이 확대되었으나 민간의 자금흐름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음.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은행 업권의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실효성 있는 구조 개혁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 우리나라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계 및 기업의 디레버리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디레버리징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들며 지속적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됨.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다는 사실임. 그러나 코로나 기간 중 누적된 일부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다면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공식통계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추정됨.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향후 늘어날 복지 지출 증가를 고려할 때 다음 세대에게 최대한 건전한 재정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함.

민간부문의 부채 감소와 더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통화정책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함.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늘어난 대규모 재정지출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체험하였음. 중앙은행의 금리 및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오랜 역사가 보여주었음.

지난 수십 년 세계는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누렸음.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임. 저물가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교역 확대와 세계화 추세 또한 국제정치·경제 환경 변화로 그 모멘텀이 다소 주춤한 상황임. 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으로 동결하고 그동안 지속해온 고금리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에 노력해야 할 시기임.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세계경제는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가별 차별화는 심화되었음. 미국, 일본의 경우 서비스수요 회복과 고용 호조에 힘입어 성장세가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중국은 수출부진과 부동산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성장 둔화의 위험이 커진 상황임.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수비가 약화되면서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으나 반도체 수출물량이 5월 이후 증가로 돌아서고 중국 여행객의 방한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이 2/4분기에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점 등은 일부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됨. 다만 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수출부진의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성향 약화, 부채누적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여력 감소, 고용의 질적 악화 등 구조적 성장 제약요인이 심화됨에 따라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는 당초 예상대로 금년 하반기중 3% 내외에서 내년중에 2% 초중반 수준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이 성장과 물가가 완만하나마 점차 균형수준으로 접근해 갈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민간부채 증가세 지속,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세 확대 등으로 실물과 금융간 불균형이 다시 확대되고 있음. 특히 가계부채는 정책금융 지원 등 공급요인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시급해 보임.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연준 긴축기조 장기화 기대에 영향받아 동반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기축통화국에

대한 금융순환의 동조화는 내외금리차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국내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음.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미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는바 당분간 주요 통화의 움직임에 따라 높은 환율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경제주체들은 환변동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 물가는 대체로 당초의 전망경로를 유지할 것이나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커진 반면 금융불균형은 확대됨에 따라 정책목표간의 상충관계는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경제 금융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성장 및 물가경로,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및 경기변동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먼저 세계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주요국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장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한 가운데 주가, 환율 등 여타 가격변수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당폭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최근 국내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세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임. 반도체 부진 지속, 중국경제 회복세 약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다시 확대된 가운데 설비투자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민간 소비도 기상여건 약화, 펜트업 소비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되었음.

향후 국내경제 성장세는 대체로 지난 5월 전망경로에 부합하겠으나 주요국의 경기 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 성장경로 상의 주요 변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임.

물가는 상승세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음. 석유류 가격이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큰 폭 하락한 가운데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까지 하락하였음.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낮아지는 모습임.

향후 물가 오름세는 등락을 보이겠으나 둔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다만 근원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속도는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의 영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관건이라고 하겠음.

금융시장은 주요국 국제금리 상승, 중국경제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높아진 모습임.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였고,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음.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디레버리징 지연으로 가계부채 누증이 재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종합하면, 향후 성장경로 및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고,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임. 향후 통화정책 운영방향도 주요 지표가 물가의 하향 안정 및 금융불균형 해소를 시사하는 수준인지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 등을 통해 정책 긴축의 강도를 조정하며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한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음.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경제는 견조한 고용을 바탕으

로 소비와 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경제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에 물가가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면에 있고 최근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 신청과 채무불이행 사태 등으로 금융불안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음. 유로경제는 독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광 등 서비스업 개선으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 일본경제는 설비투자 외 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 30여년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가 부진하여 성장세 지속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국내경제는 경기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고 앞으로 IT경기 개선,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개선 폭은 중국경제 부진 탈피와 반도체 단가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대외여건을 보면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 증가,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 등으로 무역수지가 6월과 7월 2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보였고, 향후 IT경기 부진이 완화되면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고 대외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음. 경상수지는 지난 5월 흑자로 전환되어 상반기에 24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고 한국은행 전망 기준, 연간 270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실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금년 들어 펜트업 수요 등에 따라 회복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5월과 특히 7월의 예년 수준을 넘어서는 긴 장마와 강수량으로 음식 숙박, 여행 등 대외활동과 관련된 소비가 부진을 보였음. 향후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상황과 소비자심리지수 등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됨. 7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과 지난해 기저효과 등으로 25개월 만의 최저치인 2.3%를 기록하였으나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근원물가도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향후 물가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지하철·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기상여건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곡물 및 식품가격 동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음. 고용은 고용률과 실업률이 양호한 상황으로 7월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여성 중심으로 21.1만명 증가하였으나 증가 규모는 2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음.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이외에도 집중호우 영향으로 농림어업 및 일용직 취업자 수가 감소한 데 기인함. 향후 고용시장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보이겠으나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둔화 흐름 등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금융시장은 미 달러화 강세와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식과 채권시장,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임.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00원대에서 등락 중으로 향후 수출회복 등에 따라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금융권 가계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져 향후 경제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금융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금년 들어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또한 7월 기업대출도 8.7조원 늘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하겠음.

현재의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둘러싼 여건을 살펴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음. 물가는 하락 추세이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PF 등 취약부분 리스크도 해소되지 않고 있음.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본격 회복 국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음.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며,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주요국의 긴축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다음 회의 시까지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등 금융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증가 정도,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속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점검해 가면서 추가로 금리인상을 할 지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3.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세계경제는 금년 상반기 중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향후에는 누적된 통화긴축 기조의 영향, 중국 경제의 회복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은 소비와 고용상황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가면서 연착륙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다만 공급망 개선과 유가 및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 그간 물가 상승률 하락의 주 요인이 소멸되면서 현시점 이후 물가 흐름은 고용상황과 임금 상승률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최근 미국의 견조한 고용상황이 서비스업 물가 하락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미국 경제의 높은 서비스업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추가적인 물가 상승률 하락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긴축 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더 길게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되고 있음. 중국의 경우 대외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의 요인으로 회복세가 약화되고 있고 부동산시장 부진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고 투자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그간 유지되어왔던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

확실성이 높아졌음. 고용 상황은 당초 전망 수준에 대체로 부합하였으나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취업자가 주로 고령층, 여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앞선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T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입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수준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특히 중국 경제의 회복 부진 및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향후 성장 경로상에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물가의 경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나타내었음. 향후 소비자물가의 경우 기저효과가 소멸되며 3%대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완만한 둔화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 및 기상여건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임.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기대 강화 및 미국 장기국채에 대한 수급여건 변화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고 국내 장기국채금리도 이에 동조화되면서 금융상황의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있음.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미국의 금융상황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한미 금리동조화로 인해 국내 금융상황도 상당 기간 긴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단위당 위험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함. 다만 누준된 가계부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총량뿐만 아니라 DSR 분포에 따른 위험가중 가계부채 규모(risk weighted HH debt amount)에 대한 추정 등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급격한 자금유

출세는 진정되는 모습이나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아직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취약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국내 외환시장은 원/달러 환율이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기대 강화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중국 경제 회복 부진 가능성, 수급 측면에서의 달러화 공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큰 폭 상승하였으나 우리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큰 규모의 대외 순금융자산 및 외환보유고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시장개입이나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이상의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금년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전망경로 대비 향후 성장과 물가,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방향 및 크기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임.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국내외 경제동향 및 전망은 대체로 지난 7월 회의 시에 비해 큰 변화는 없어 보임.

미국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고용시장과 소비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가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음. 중국경제는 부동산 침체, 수출 부진 등으로 예상보다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관광업 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진 등으로 미약한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일본경제는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지속성에 대해서는 다소 불확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세계교역은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는 지난해 이후 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연장조치 등

으로 상승하였음. 주요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목표수준대로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기는 둔화흐름이 지속되었으나, 최근 기후오염 등으로 다소 주춤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고 수출 부진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반도체 경기의 경우 주요 공급사 감소 및 AI 수요 등으로 저점을 다지는 모습임.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완만한 둔화흐름을 지속하나 당초 전망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주택 가격은 최근 상승 전환했으며 수도권외의 경우 상승폭이 커지고 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저효과로 상당폭 둔화되었으나 8월 이후 다시 높아질 전망이며,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다소 더딘 모습임.

금융·외환시장은 미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 중국 부동산관련 리스크 등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대체로 완화적 흐름을 지속해 왔음. 국고채 금리가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연준 긴축기조 장기화, 수급여건 악화 우려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근 상승했으며 단기시장금리는 MMF 수신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음. 최근 들어 국내 부동산 가격 움직임과 더불어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커지고, 기업대출 증가폭 역시 확대되고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할 부분임. 동시에 은행 및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완만히 상승하고, 일부 비은행예금기관의 안정성 지속 여부도 아직 주의해 지켜보아야 할 부분임.

이상의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주요국 통화정책의 추이에 따른 외환시장의 움직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의 목표대로의 안정 경로 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향후 필요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